

건설동향브리핑

제446호 (2014. 1. 20)

■ 경제 동향

- 2013년 11월 국내 건설수주, 민간 부문 부진으로 1.2% 감소

■ 정책 · 경영

- 2014년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확대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발표, 2년 간 시범 사업 추진

■ 정보 마당

-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본의 싱가포르 건축공사 대응과 시사점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시장 위기 극복의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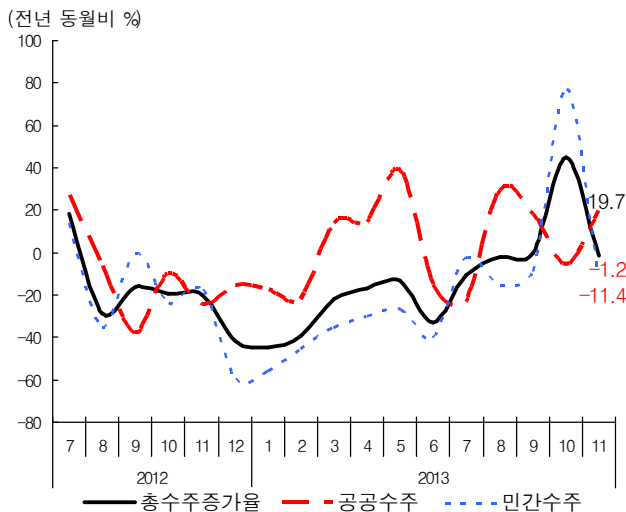
2013년 11월 국내 건설수주, 민간 부문 부진으로 1.2% 감소

- 1~11월 간 누적 수주는 15.2% 감소한 77조원, 9년 내 최저치 -

■ 2013년 11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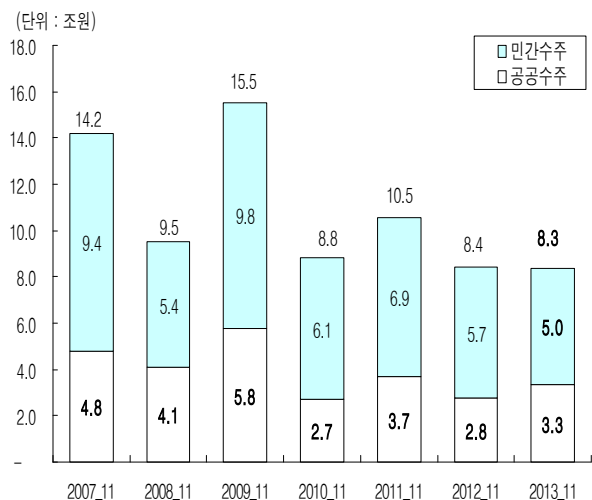
- 2013년 11월,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 11월 실적으로는 8년 내 최저치인 8.3조원에 그침.
 - 전월인 10월에 44.9% 증가하면서 15개월 만에 증가했으나, 11월에 1.2% 감소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부진한 모습을 시현함.
 - 특히, 8.3조원의 수주 실적은 8년 내 최저치로, 민간 부문의 부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연도별 11월 건설수주 비교>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공공 19.7% 증가, 민간 11.4% 감소

- 공공수주는 토목과 주택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9.7% 증가한 3.3조원을 기록
 -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한 1.8조원을 기록함.
 - 건축수주 또한 26.2% 증가한 1.5조원으로 양호했음.
 - 비주택 건축이 13.1% 감소해 부진했으나, 주택 건축이 201.8% 급등한 0.7조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임.

- 민간수주의 경우, 전 공종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1.4% 감소, 8년 내 최저치인 5.0조원에 그침.
 - 토목수주는 28.5% 감소한 0.7조원을 기록함.
 - 건축수주는 7.8% 감소한 4.3조원을 기록함. 주택 건축이 2.1% 감소한 2.4조원으로 8년 내 최저치를, 비주택 건축 또한 11.1% 감소한 1.9조원으로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2013년 11월 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 : 조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3. 11월	8.3	3.3	1.8	1.5	0.7	0.9	5.0	0.7	4.3	2.4	1.9
증감률	-1.2	19.7	14.6	26.2	201.8	-13.1	-11.4	-28.5	-7.8	-2.1	-11.1
2013. 1~11월	77.0	28.2	16.8	11.4	3.0	8.4	48.8	8.4	40.3	21.9	18.4
증감률	-15.2	1.7	2.8	0.2	-28.6	17.1	-22.6	-45.9	-14.9	-21.0	-17.6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13년 1~11월 누적 수주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 9년 내 최저치인 77조원 기록

- 2013년 1~11월 간 누적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한 77조원을 기록함.
 - 1~11월 간 누적 수주액인 77조원은 같은 기간 누적 실적으로는 9년 내 최저치임.
 -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11월 누적 수주액 평균이 91.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대략 14조~15조원 정도 부진한 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누적 공공수주는 전년 동기비 1.7% 증가한 28.2조원을 기록함.
 - 비록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2007년 이후 11월 누적 수주가 대략 30조원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2조~3조원 정도 부진한 실적임.
- 누적 민간수주는 전년 동기비 22.6% 감소한 48.8조원을 기록함.
 - 1~11월 간 누적 민간 수주액인 48.8조원은 4년 내 최저치임. 2005~12년 간 11월 누적 수주액 평균이 60.3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대략 11조~12조원 정도 부진한 실적임.
 - 토목수주가 7년 내 최저치인 8.4조원을, 주택수주가 12년 내 최저치인 21.9조원을 기록해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2014년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확대

- 오지 및 SOC 현장의 인력 부족 반영, 근본적으로는 내국 인력 육성 시급 -

■ 건설 현장의 외국 인력 도입 제도의 개요

- 건설 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비전문 외국 인력 정책 분야의 비전문취업사증(E-9)과 건설업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취업하는 근로자임.
- 고용허가제란, 국내 입국 전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건설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임.
- 건설업 취업등록제란,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하여 건설업 취업을 위해 소정의 취업 교육 및 구직 등록을 마친 외국 국적의 동포를 정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설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임.
- <표 1>에서 보듯이 고용허가제(E-9)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등록제(H-2)에 비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기본 임금이 지급되며, 주로 SOC 현장에서 일함.
- 외국 인력의 규모와 관련, 오지 및 SOC 현장에서 기능인력의 부족을 호소하면서 2013년까지 1,600명으로 유지되던 고용허가제의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체류자의 근절 및 내국 인력의 육성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함.

<표 1> 건설 현장의 외국 인력 도입 제도의 개요 : 고용허가제와 취업등록제의 비교

구분	고용허가제(E-9)	건설업 취업등록제(H-2)
대상 인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송출 국가의 국민 (베트남, 태국 등 15개 국가)	외국 국적 동포 (중국 등 11개 국가)
체류 및 취업 기간	취업 기간 3년, (재고용시 1년 10개월 연장)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 가능
의무 고용 기간 유무	1년 단위 재계약, 사업장 변경 3회	고용 기간 및 사업장 변경 등 제한 없음
기본 임금 지급 여부	근로일에 대해 8시간 기본 임금 지급	기본 임금 없음
대상 현장	법규상의 제한은 없으나, SOC 현장 등에 우선 배정 (건설 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법규상의 제한은 없음 (건설 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사업주의 내국인 고용 노력 여부	7일 이상 고용 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7일 이상 고용 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노동 관련법 적용	·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 ·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 관계법 적용 ·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도입 제한 규모	연간 2,350명(2014년)	연간 55,000명(2014년)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업무편람(2013).

■ 2014년도 건설 현장 외국 인력의 도입 규모 : 고용허가제 2,350명, 방문취업제 55,000명

-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확대하고, 방문취업제의 도입 규모는 동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2013.12.27)상 2014년도 외국 인력의 도입 규모에 의하면,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E-9)의 도입 규모는 2,350명(<표 2> 참조), 동포(H-2)의 건설업 취업등록제 도입 규모는 5만 5,000명임.
 - 2013년에 비해 고용허가제의 도입 규모는 1,600명에서 750명이 증가되었고,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도입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었음. 후자의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 대상자를 2011년 12월 이전 취업 교육 이수자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음.
 - 2014년 건설업의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공사 금액 1억원당 0.4명, 신규 고용의 한도는 공사 금액 1억원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으로 함(<표 3> 참조).

<표 2> 2014년 고용허가제 업종별 도입 규모(E-9)

구분	합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	53,000	42,250	6,000	2,300	2,350	100

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2013. 12. 27

<표 3> 2014년 건설업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인원 및 신규 고용 한도

연평균 공사 금액	고용 허용 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 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2013. 12. 27

■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 필요 : 내국 인력 진입 촉진 및 육성 시급

- 외국 인력의 도입은 숙련인력의 부족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법 필요
 - 외국 인력은 언어 소통 및 체류 기간상에 문제가 있어 숙련인력의 원천으로는 한계가 있음.
 - 숙련인력의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내국인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육성에 있으며, 출발점으로서 적정 공사비의 확보와 근로자의 임금 개선 등 직업 전망의 제시가 시급

심규범(연구위원 · gbskim@ceriK.re.kr)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발표, 2년 간 시범 사업 추진

- 2015년까지 최저가낙찰제 병행, 300억원 미만 정부 공사는 적격심사제 적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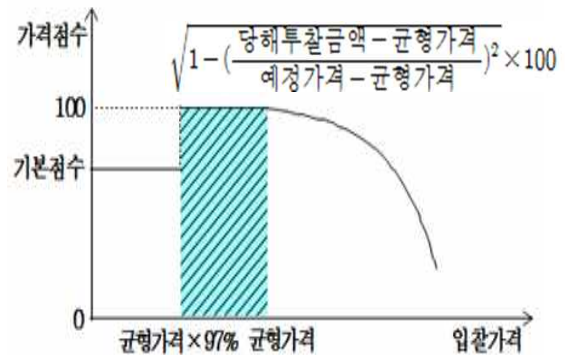
■ 공사 수행 능력 및 투찰 가격,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낙찰자 선정

-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입찰 제도로서 종합심사낙찰제를 발표
 - 시범 사업 기간 중에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유예하고, 300억원 미만의 정부 발주 공사는 현행과 같이 적격심사제를 적용
-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수행 능력과 투찰 가격, 사회적 책임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며, 동일 점수시에는 입찰 가격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항목 및 가중치>

심사 분야	평가 항목	범위	
공사 수행 능력 (40~50점)	전문성	동일 공사 시공 실적	20~30%
		매출액 비중	0~20%
	역량	배치 기술자	20~30%
		시공 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 역량	0~20%
소계		100%	
입찰 가격 (50~60점)	투찰 가격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20~40%	
	공정 거래	30~40%	
	건설 안전	20~40%	
	소 계	100%	

<투찰 가격의 평가 방법>



- 동일 공사 시공 실적은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핵심 공법, 구조, 규모 등 가운데 3 개 이내의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시공 경험의 보유 여부를 평가
 - 예를 들어, 교량은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초장대교량 등으로 나누어 시공 경험을 평가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핵심 공법 등 시공 실적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의 유경험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 공사 시공 실적 배점의 최대 80%까지 득점 가능
- 매출액의 비중은 교통 시설, 수자원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자의 총매출액 대비 해당 분야의 매출액을 반영하여 전문화된 업체를 우대
 - 배치 기술자의 동일 공종 그룹 시공 경력은 실제 현장에 배치할 현장 대리인과 분야

별 핵심 기술자의 시공 경력을 평가

- 시공 평가 점수는 최근 3년 간 해당 업체가 동일 공종 그룹 공사에서 부여받은 시공 평가 점수의 가중 평균을 활용
- 공사 규모별 시공 역량 평가는 공사 난이도 및 규모에 따라 입찰등급제(유자격자 명부)를 운영하고, 상위 등급의 업체가 하위 등급의 사업에 입찰시 감점 처리
- 투찰 가격의 평가는 입찰가의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입찰 금액 평균(균형 가격)을 통해 평가하는데, 균형 가격 대비 -3%까지 투찰시에는 동일 점수를 부여하되, -3% 미만 금액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기본 점수(80점)만을 부여
 - 입찰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되, 점수 상승폭은 제한
 -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는 세부 공종별 단가 적정성과 하도급 단가 계획을 심사
 - 추정 가격 1,000억원 이상은 순수내역입찰로 진행하고, 물량 적정성과 시공 계획 심사
-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는 고용 창출 기여도 및 고용 환경 개선 실적, 입찰 담합 등 공동 행위, 「하도급법」 / 「공정거래법」 위반, 상호 협력 평가, 사망만인률과 재해율 등을 평가

■ 저가 낙찰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나 부작용 해소 필요

-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배경은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났던 폐해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사회적 후생을 저하시키는 저가 투찰의 방지 대책이 가장 중요
 - 입찰 가격의 상위 40%와 하위 10%를 제외한 균형 가격 대비 -3%까지 모두 만점을 부여할 경우 최저가 투찰자까지 만점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 때 최종 점수가 동일하다면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가 되므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함. 따라서, 시범 사업 등을 통하여 덤핑 입찰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이 요구됨.
- 입찰자 평가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발주기관별로 현장이나 사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 이행 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변별력을 강화하되 대형 및 중견·중소업체 간에 호혜 평등한 경쟁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 필요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본의 싱가포르 건축공사 대응과 시사점¹⁾

- 자국화 정책과 중국 자본 유입이 외국 기업을 어렵게 만들어 -

■ 싱가포르의 건설산업 정책과 최근의 건축공사 개황

- 건설 정책의 근간인 ‘건설 21(Construction 21)’은 자국 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 재창조(Re-inventing Construction)로 포장한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평
- 부동산 개발 시장에 대규모의 중국계 자본이 유입되면서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싱가포르부동산개발협회가 독자적인 발주 및 계약 체계를 강제하기 시작
 - 최근 부동산개발 자금의 70~80%가 중국계 자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최근의 발주 및 입·낙찰과 계약 방식

-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턴키(Design Build, DB) 방식은 용어와 달리 독특한 특징이 있음.
 - 종합 품질 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와 통합 시공 방식(Integrated Construction Method, ICM)을 도입하여 품질은 높게 가격은 낮게 만들었음.
 - 시공에 지명 하도급자 지명권과 함께 설계에도 일종의 하도급자인 컨설턴트를 지명할 수 있는 ‘Novation 방식’을 도입하여 자국 업체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시공성(Buildability)이라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종별 계약 패키지 분할을 촉진시킴.
- 3대 계약 조건
 - 공공공사 계약 표준 약관(PSSCOC)은 싱가포르 정부 단독 투자 사업에 도입
 - 싱가포르건축학회(SIA)의 표준 약관은 건축 설계 컨설턴트의 권한을 강화시킨 약관
 - 싱가포르부동산개발협회(REDAS)의 표준 약관은 중국계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적용을 확대하고 강제해가는 추세임.

■ 외국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

- 발주자는 하도급자 지명권은 보유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1) 본고는 2013년 9월, 일본 도쿄와 교토에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25년 이상 싱가포르에서 건설 영업을 한 일본 종합건설사(제네콘)의 한 임원이 토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편집했음.

- 설계 및 시공 모두 자국 업체를 하도급자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하면서도 계약 관리(품질과 비용, 수행 역량, 공기 등)에 대해서는 주계약자에게 일임
- 설계자 지명권(Novation Contract)은 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
 - 턴키 방식임에도 기본 설계의 일부는 발주자가 독자 수행하며, 나머지 설계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남겨 놓는 독특한 방식(영국식의 방식을 자국화시킴)을 강제하는 구조
 - 발주자 편에서 설계한 컨설턴트를 턴키 방식에서 계약자가 활용하도록 강제한 명분은 설계의 일관성 확보에 있음을 주장하나 발주자 이익 대변자에 불과하다는 평가

■ 최근의 발주 및 계약 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일본의 대응 사례와 결론

- 사업 관리 조직에 상부에는 일본인을, 하부에는 대부분 싱가포르 현지인을 투입
 - 32개월의 공기가 소요되는 40층 규모의 오피스빌딩 공사에 일본인 관리자 30명, 싱가포르 현지인 43명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고비용 구조로 변질됨.
 - 현지인 대부분은 설계 및 시공 지명 하도급자 수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
 - 한국은 유사한 공사에서 한국인 8명, 싱가포르인 8명, 말레이시아인 3명을 투입한 사례와 대조됨.
- 싱가포르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외국 기업은 생존 불가라는 판단을 내림.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기업이 싱가포르 건축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임.
 -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보다 특정 공종에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일본의 경험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싱가포르의 자국화 정책과 발주 및 계약 방식은 일본 기업들에게 부메랑으로 작용
 - 영국식과 일본식을 혼합한 독창적인 방식의 개발은 일본계 기업의 영향이 컸다는 반성을 하고 있음(한 때의 자량이 현재는 대규모의 손실이 되어 돌아왔음을 자조).
- 국내 기업도 예외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함.
 - 열악해져 가는 시장에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로 가야 함.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 9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 '제16차 분과조정위원회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분쟁 조정 심의
	국민경제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관련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자문위원 의견 수렴
1. 10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과 주최, '건설 안전 정책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건설 안전 관련 대통령 보고 사항 점검 및 향후 대책 협의
1. 15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기금과 주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주택기금 여유 자금 운용 전담기관 선정 방안 및 2014년 기금 운용 계획안 관련 회의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최, '취업 지원 민간 위탁 기관 심사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취약 계층 취업 지원 민간 위탁기관 심사
1. 17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기재과 주최, '제5차 골재 수급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건설근로자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근로자 기능 훈련 사업 평가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훈련 사업 평가 보고서(안) 검토
	경기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정책과 주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평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지정 등에 관한 회의

■ '2014년도 부서별 업무 계획 토론회' 개최

- 연구원은 1. 23(목), '2014년도 부서별 업무 계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 토론회는 연구 및 사업·행정 부서가 참여하여 2014년도 부서별 연구 및 사업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함.

■ 2014년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여러 종류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 이에 연구 결과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 중임.
- 도서 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연구 발간물 및 정기 간행물 등과 수시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건설시장 위기 극복의 방향

최근의 건설시장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적 성장 시대의 종말이다. 건설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즉,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은 1995년의 25%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2010년에는 15%까지 떨어졌고,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1%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제 양적 성장을 최우선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미래 건설시장은 양적 성장의 정체와 더불어 질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건설시장은 급격한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한 마디로 주택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주택은 앞으로 투자 가치보다 사용 가치가 중시되는 상품으로 변화될 것이다. 주택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건설기업들로 하여금 지급까지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버리고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을 요구한다.

공공 건설시장의 위축도 예고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공 부문에서의 수요 위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시장을 적극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주어진 상황으로만 보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 공공건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건설업계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축적하여 왔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때 공공 부문에서의 건설산업의 역할은 보다 안정적인 지지를 얻어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이 장래에도 지속 성장해 나가는 길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밖에 없다. 녹색시장과 해외시장은 앞으로 건설산업이 새롭게 성장을 지속해 나갈 미래 유망시장이다. 문제는 이 시장들이 저절로 열리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녹색시장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의 영역은 보다 확장되고 경계마저 사라지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녹색시장에서 건설산업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핵심 설비와 관련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내수시장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문제는 경쟁력이다. 현재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플랜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들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확실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 정부의 건설정책은 해외건설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축된 내수시장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